



폭설에 파묻힌 광주 22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밤새 내린 눈이 수북이 쌓이면서 입주민들이 차량을 뒤덮은 눈을 쓸어내고 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광주지역은 이날 8.7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버스 끊기고 빙판길 택시 운행 중단... 밤 10시30분 넘으면 대중교통 '마비'

## 광주 연일 '눈폭탄'... 귀가 전쟁 '눈눈눈'

시민 혈세 투입 '준공영제' 운영되는 시내버스  
폭설 땀 급행간선 위주로 심야 연장 운행 시급

광주에 올해 첫 대설주의보가 내린 지난 17일 밤, 광주시 동구 모 커피숍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끝낸 대학생 김민지(21)양은 홀로 1시간동안 눈길을 걸어 귀가했다.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양은 "버스는 이미 끊긴데다, 폭설 때문에 택시도 없어 결국 북구정 앞 자취방까지 걸어 가야했다"면서 "중간에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무서웠다. 폭설 때는 버스 등 대중 교통을 연장 운행해줬으면 한다. 서울은 심야에 이동하는 시민이 많다고 심야버스도 운행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김양은 두 번째 대설주의보가 내린 지난 21일에는 커피숍 사장의 배려로 이른 퇴근을 했지만, 김양의 옆 커피숍 여대생 아르바이트생은 이날도 걸어서 집에 갔다고 한다.

김양의 사례처럼 광주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7일과 21일 시내버스 막차를 놓친 수많은 시민들은 길게는 2시간이 넘도록 걸어서 귀가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교통사고를 우려한 대부분의 택시가 운행을 중단한데다, 시민 혈세가 투입된 준공영제로 운영중인 시내버스타까지 밤 10시~10시30분 사이에 모두 끊기면서 개인 차량이 없는 시민들의 발이 묶인 것이다.

광주시가 올해 잦은 폭설에도 '시민에 대한 배려 없는 폭설 대책'을 되풀이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시장' 시대에 걸맞게 도로에 염화칼슘만 살포하는 수동적 제설대책에서 벗어나 시내버스와 지하철 연장 운행, 도로 위 차선 정비 등 '시민중심'의 능동적 제설

### 광주·눈 얼마나 많이 왔나

총 적설량	눈 내린 날	대설 주의보
2013년 15.4cm	4일	1회
2014년 37.4cm	14일	2회

12월1~22일 기준

대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등은 폭설 시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연장 운행하는가 하면 심야에 이동하는 시민을 배려한 심야 버스를 운행하는 등 광주시와는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5개 구에 따르면 광주도 시철도 1호선의 상·하행역 전동차 막차 출발시간은 밤 11시27분이며, 시내버스는 대부분 밤 10시~10시30분 사이 막차운행이 마무리된다. 이 때문에 목척지가 도시철도 노선에서 벗어난 시민은 밤 10시30분 이후에는 택시 등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폭설 때는 택시 대부분이 운행을 중단하는 탓에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를 놓친 시민들이 각종 사고 위험

을 안고 걸어서 귀가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광주의 대중교통시스템이 대설주의보 등과는 연계되지 않은 탓에 폭설에도 연장 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대설주의보 시 지하철을 연장 운행하고, 시내버스의 경우 전체 노선은 아니더라도 급행 간선 위주로라도 연장 운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차량운전자의 불만도 폭발적이다. 광주 도심의 경우 눈이나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희미한 도로 차선 탓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광주시가 열악한 재정난 등을 이유로 도로 차선 도색 등 시민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어서다. 광주가 교통사고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매년 겨울이면 반복되는 시민 불만 사례지만 폭설시 생활쓰레기 미수거, 이면도로 녹장 제설작업 등도 여전하다.

한편 올 12월 들어 현재까지 광주지역 예만 14일동안 37.4cm의 눈이 내렸으며 5cm 이상 내린 대설주의보도 2차례나 발효됐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총 4일간 15.4cm의 눈이 내렸으며, 대설주의보도 1차례에 그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사학·군인연금 개혁 추진

정부 내년엔...3월 아닌 9월 신학기제 개편도 검토

### 2015 경제정책방향 확정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가 내년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을 시도한다. 또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3월이 아닌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제 개편도 검토한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결정 제관제정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3·8면>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 회복을 위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가계대출, 기업구조조정,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3대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엔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2016년 말 재정지출 만기 도래에 맞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부과

급어 체계와 재정 지원 방식을 바꾼다. 교육분야에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200조원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엔 만기가 도래하는 42조원 정도가 우선적인 대상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투자·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규제 기요턴(단두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8%를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백값 인상 효과(+0.6%포인트)를 포함해 2.0%로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통진당 비례대표 6명 지방의원직 상실

5명이 광주·전남 의원

지역구 기초 31명은 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3면>

선관위는 이날 오전 오전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현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현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

의 의원직 상실 광주·전남 비례대표

광주시의회	이미욱
전남도의회	오미화
여주시의회	김재영
순천시의회	김재임
해남군의회	김미희

의 퇴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내려진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전북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순천시의회·여주시의회·해남군의회 소속으로 전체 6명 중 5명이 광주·전남지역 의원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청구가 없어 현재가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로운 모험의 시작

The New GLA-Class

Mercedes-Benz